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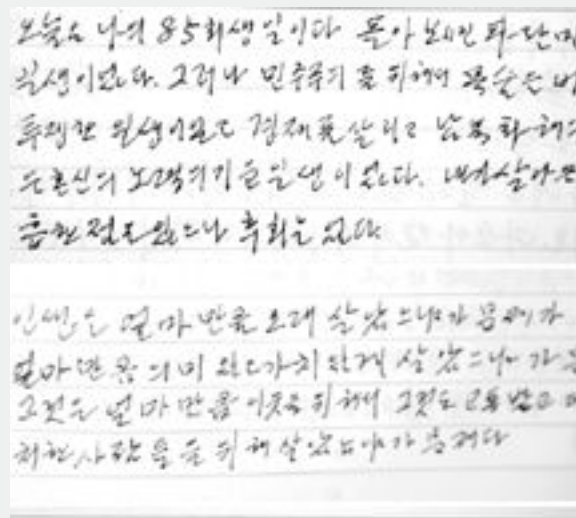
“하루 종일 아내와 지냈다... 둘이 있어 기쁘다”

■ DJ ‘마지막 일기’ 공개

“돌아보면 파란만장의 일생이었다.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생의 마지막에 쓴 일기가 공개됐다. 21일 김 전 대통령 측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제목으로 3만부를 제작해 전국 각 분향소에 배포한 DJ의 유훈 일기에는 말년에 느낀 삶에 대한 단상과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시국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일기는 DJ가 2009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친필로 간간히 써내려간 100일간의 일기 중 31일치다. 친필 메모 형식인 이 일기에는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한 듯 85년간의 인생을 반추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 건강 문제와 평생 반려자였던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뜻한 감정과 설날에도 임금을 못받는 근로자에 대한 걱정,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를 찾은 뒤 느꼈던 감동 등 인간적 면모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이와 함께 응산 화재참사 등에 대한 시국인식과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 비화도 포함됐다.

한편 DJ측이 이날 일기의 일부분만 공개하면서 미공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공개 부분에는 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적 메시지와 함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인물평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J측은 시국인식 언급 부분 등이 공개되면 자칫 국장의 화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개를 유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현안 공동추진으로 東西갈등 해소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동서화합을 위한 각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현안의 공동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통령 서거이후 지역주의 해소가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른 것은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고른 인재 등용 등 지역주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정치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영호남 지역의 현안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동서화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호남간에는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 수년전부터 지역정치인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100만

명 이상의 내륙도시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대구·광주간 의료산업 발전 협약 체결에 따라 후속 협력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광주는 인근 환송과 의약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시와 안-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대구간 철도 건설과 새마을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광구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영호남이 오랜 갈등을 털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호남 현안의 공동 추진은 낙후된 지방의 발전은 물론 김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

‘칠전팔기 나로호’ 성공발사 기원한다

지난 19일 예정시각을 7분56초 남기고 연료밸브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나로호의 발사 일정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대로 발사 중지의 원인이었던 자동시퀀스내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수정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나로호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발사가 연기됐다. 우주 각국 대한민국의 꿈을 안은 나로호가 멋지게 비상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나로호 발사가 여러 차례 중지된 것은 우주개발의 길에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지를 잘 보여준다. 인공위성 발사는 작은 결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다. 주도면밀한 준비와 철두철미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로호 발사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애초 한국-러시아 공동개발이라고 했던 1단 로켓이 실제로는 러시아가 단독으로 개발한 로켓 중지의 원인이었던 자동시퀀스내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수정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주 개발은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실패를 거울삼아 우주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에는 나로호가 성공리에 발사돼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열번째 국가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 “DJ 뜻 기려 민생·남북 현안도 진전”

한나라당이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정상화, 남북현안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3일 영결식까지 구체적인 정국적인 논의 등 정치 일정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 고위급 조문단의 국회빈소 방문, 영결식 이후 정기국회 일정의 등을 감안해 민생·남북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자였고 남북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각

시키면서 고인의 뜻을 계승해 여야 대화,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애도부념을 한 뒤 “고인은 의회주의자였고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 헌신했다”며 “민주당도 고인의 뜻을 받들어 국회로 돌아와 다음주 월요일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북한 고위급 조문단의 방문과 관련, 남북 당국간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계 대표·시민 등 2만4천명 영결식 초청 사상 최대

○~23일 오후 2시 국회 앞마당에서 거행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각계 대표와 시민 등 2만4천 명이 초청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이재종 의정담당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영결식은 장의위원과 외교사절, 시민 대표 등 정부가 선정한 인사 9천 명과 유가족 측이 추천한 인사 1만5천 명 등 총 2만4천 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청인사 이외의 국민은 경호·경비 문제 등 때문에 영결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담당관은 “유가족 측과 일반 국민의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장을 엄수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려고 초청인사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부는 김 전 대통령 측이 고려하는 서울광장 추모행사나 노제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21일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총 23만1천379명이 조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조문객은 서울 5만 1천830명, 광주 3만2천615명, 전남 6만9천 556명, 전북 1만8천13명, 경기 1만7천743명, 부산 6천435명, 대전 4천600명 등이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조문단은 분향을 한 뒤 5~6초가량 고개를 숙어 묵념을 했다. 묵념을 할 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 박지원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유족측으로 향한 북한 조문단은 박지원 의원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홍길씨 등 유족은 물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한병숙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 수십명과 악수를 했다.

정 대표는 김 비서와 악수하며 “김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하셨다”고 하자 김 비서는 “예”라고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 북측이 조선중앙통신으로 조의를 표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고 했지만 김 비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국회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영원한 선생님이로 ...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A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사건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FAX 222-4262)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